

미투 악용 ‘묻지마’ 비방·‘카더라’ 가짜뉴스에 후보들 몸살

전남 곳곳 네거티브 선거전

6·13지방선거가 두 달여 앞으로 다가오면서 가짜뉴스가 기승을 부리는 바람에 후보들이 몸살을 앓고 있다.

5일 전남지역 정가에 따르면 가짜뉴스와 네거티브 선거전략으로 지방선거가 혼탁해지고 있다. 특히 ‘미투(MeToo·나도 당했다) 운동’을 악용한 ‘묻지마’ 비방과 ‘카더라’ 폭로가 속출하고 있다.

김종식 더불어민주당 목포시장 예비후보 측은 최근 SNS와 인터넷매체 등을 통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2명을 고발했다.

김 예비후보는 “그동안 SNS에서 누구 인지를 밝히지는 않았으나 자신(예비후보자)임을 특정할 수 있는 내용의 악의적 글들이 확산됐다”면서 “급기야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실명까지 적시해 고소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들 2명은 대법원에서 무혐의 판결을 받은 김 예비후보 부인의 과거 일에 대해 최종 판결은 거론하지 않고 1심에서 유죄를 받은 판결만 거론하는 등 악의적으로 비방했다고 설명했다.

김 예비후보와 관련한 ‘미투’도 급속 확산되고 있다. 목포부시장 시절 기간제 직원과의 사이에 아이가 있다는 소문이다. 급기야 이 여직원의 남편이 최근 “가정이 파탄나게 생겼다”며 진상 규명을 촉구하는 시위를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여수에서는 ‘카더라 폭로’로 후보들이 곤혹스러워하고 있다. 주철현 여수시장의

목포 허위사실 유포 2명 고발

여수서도 수사 요청 잇따라

여수 상포지구 행정특혜 의혹이 무혐의 처분됐지만 사실인양 가짜뉴스가 퍼지고 있다는 것이다.

주 시장은 최근 허위사실 유포와 관련해 시민단체 활동가 A씨를 고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권세도 더불어민주당 여수시장 예비후보는 5일 “SNS상에서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B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권 예비후보 측은 “B씨는 최근 지인들과 나는 SNS 단체 대화방에서 권 예비후보가 1987년 박종철 열사 고문자 사건과 2012 대선 댓글사건 연루됐고, 국민의당에 입당한 사실이 있는 것처럼 허위사실을 퍼트렸다”고 주장했다.

권 예비후보 측은 “B씨가 퍼트린 내용은 언급 가치도 없는 허위사실”이라며 “특정 후보 세력의 조직적 개입을 의심할 수밖에 없어 검찰에 수사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지역정가 관계자는 “단순히 사실 왜곡을 넘어 후보자 비방과 인신공격, 심지어 흑색선전으로 번지고 있다”며 “시민들의 눈과 귀를 가리는 가짜뉴스 유포자를 강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지역정가 관계자는 “단순히 사실 왜곡을 넘어 후보자 비방과 인신공격, 심지어 흑색선전으로 번지고 있다”며 “시민들의 눈과 귀를 가리는 가짜뉴스 유포자를 강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목포=고규석기자 yousou@ /여수=김정화기자 chkim@



5·18묘지 참배 강기정 더불어민주당 광주시장 예비후보가 자신을 단일후보로 추대한 같은 당 민형배·최영호 전 예비후보와 함께 5일 오전 광주 국립 5·18민주묘지를 참배했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여론조사용 민주 경선 후보 경력에 문제인 대통령 이름 표기 놓고 논란

선거관리위원회 의견 팽팽

더불어민주당이 다음주부터 광역단체장 후보 경선에 들어가는 가운데 경선후보 여론조사시 사용하는 후보들의 대표 경력에 문제인 대통령의 이름을 넣는 것을 허용할지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민주당 선거관리위원회의 지난 4일 회의에서는 대통령 이름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과 허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팽팽히 맞선 것으로 5일 알려졌다.

한 선거위원은 “잔반이 대립하는 가운데 최종적으로는 9명의 참석자가 5대 4 구도로 대통령 이름을 쓰지 말자는 의견이 살짝 우세했다”고 전했다.

선거위원회에서 대표경력에 대통령 이름을 쓰는 것이 문제가 된 것은 여론조사에 사용되는 직함에 문제인 대통령 등의 이름을 쓰는 것과 ‘제19대 대통령’ 등의 표현을 사용하는 것 간에 차이가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당내에서는 가령 여론조사시 사용되는 직함에 문 대통령 이름도 같이 반영할 경우 그렇지 않을 때보다 대략 10%포인트 정도 지지율이 더 나오는 경향이 있다는 평가가 많다.

이런 이유로 일부 선거위원은 “이름을 넣으면 실제 지지도보다 과대 평가될 수 있다” 등의 이유로 대통령 이름 사용에 반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다른 선거위원들은 “정식명칭을 사용해 지지율을 높일 수 있는 사람이 경선에서도 선전하는 것이 자연스럽다”면서 찬성 입장을 피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6일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이 문제를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관련, 민주당 추미애 대표는 전날 “2014년 지방선거와 2016년 총선을 준용한다고 한 것이 당의 방침”이라며 대통령 이름을 사용하지 않는 것에 대한 반대 입장을 밝혔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지지선언 허위” vs “관행적 축사”... 전남지사 경선 후보 신경전

더불어민주당 전남지사 경선 후보들 사이에 이른바 대세론을 놓고 설전이 벌어졌다.

김영록 예비후보 측이 개소식 축하 영상 발언을 들어 추미애 대표 등 지지와 응원으로 “대세를 탔다”고 주장하자 신정훈 예비후보 측이 “허위사실 유포”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신정훈 예비후보는 5일 전남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김 예비후보가 허위사실을 적시한 보도자료를 배

포해 여론을 조작하고, 블로그와 페이스북 등에 후보 자격과 관련한 허위 내용을 퍼트렸다”고 주장했다.

신 예비후보는 “김 예비후보는 보도자료에서 ‘추미애 대표, 정세균 국회의장, 이해찬 전 국무총리 등이 자신에 대한 지지를 선언했다’고 주장했다”며 “언급된 정치인들은 김 예비후보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의례적인 인사말 또는 축하 영상을 보냈을뿐인데도 이런 내용을 다수 언론매체가 기사화하도록 했다”고 지적했다.

또 “김 예비후보 측은 SNS를 통해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이 전남지사 출마를 요청했다’는 허위사실을 공표하기도 했다”며 “공식 사과와 함께 예비후보직을 사퇴해야 한다”고 공세를 폈다.

충분한 해명이 없으면 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김 예비후보는 지난 4일 보도자료를 내고 “추미애 대표, 정세균 국회의장, 이해찬 전남도당 위원장 등 지지와 응원이 이어지면서 ‘김영록 대세론’이 갈수록 힘을

얻고 있다”고 밝혔다.

보도자료는 지난 3일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맞춰 추 대표, 정 의장이 보낸 축하 영상 메시지와 함께 허경만·최인기 전 전남지사, 이해찬 전 총리, 강기갑 전 민주노동당 대표 등 종량감 있는 인사들이 지지를 공식 선언했다”는 내용도 담았다.

김 예비후보 선거대책본부는 신 후보 측 주장에 대해 “전혀적인 정치 공세”라며 “일일이 대응할 필요를 느끼지 못한다”고 말했다. /박정욱기자 jwpark@

윤건영·김창선 남북정상 ‘복심’ 참여...실무회담 속도

3주 앞으로 다가온 문재인 대통령과 북핵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남북정상회담을 앞두고 남과 북이 실무접촉을 시작하며 회담준비에 ‘속도’를 내기 시작했다. 특히, 문 대통령과 김 위원장의 최측근이라 할 수 있는 윤건영 청와대 국정상황실장과 김창선 국무위원회 부장이 실무회담에 참여함으로써 ‘인적 핫라인’을 통해 성공적 회담이 치러질 수 있도록 원활한 소통에 만전을 기하는 모습이다.

남북은 5일 판문점 남측지역 평화의 집에서 오전 10시부터 오후 2시까지 4시간 동안 점심도 거른 채 남북정상회담 준비를 위한 의견·경호·보도 실무회담을 진행했다. 우리 측에서는 김상곤 국정원 2차장을 수석대표로 조한기 청와대 의견비서관, 권혁기 청와대 춘추관장, 윤건영 청와대 국정상황실장, 신용욱 청와대 경호차장 등 5명이 참석했다. 북측에서는 수석대표인 김창선 국무위원회 부장을

포함해 신원철·리현·로경철·김철규·마원춘 등 총 6명이 참석했다.

첫 실무회담은 남북이 서로가 생각하는 안을 확인하는 선에서 마무리된 것으로 보인다. 권 관장은 회담 후 춘추관에서 기자들을 만나 “진지하고 꼼꼼하게 협의했다”며 남북정상회담을 성공적으로 준비하기 위해 열심히 협의했다고 전했다. 다만 (남북 정상)의 경호와 동선, 의전에 관련된 회담이라 내용은 알려드릴 수 없다”며 “

결론이 난 사항은 없다”고 설명했다.

첫 실무회담에서는 문 대통령과 김 위원장의 동선, 양측의 대면 시점 및 방식, 정상회담 시간과 오·만찬 여부 등 27일 열리는 남북정상회담의 세부 일정과 그에 따른 경호 조치가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다.

가장 관심을 끄는 부분 중 하나는 김 위원장이 군사분계선(MDL)을 넘어 평화의 집까지 이동하는 경로다. 김 위원장이 어느 경로로 평화의 집에 도착해 문 대통령을 만나느냐는 분단 후 처음으로 북한 최고지도자가 남측 땅을 밟는다는 점 때문에 그 상징성이 더욱 크다. /연합뉴스

질문이 있는 교실, 행복한 학교
Engaging Classrooms, Joyful Schools

함께 배우고 나누는 행복한 광주교육

광주광역시교육청